

주간 통일정세

2014-35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월북 南주민 11일 판문점 통해 인도"(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5일 "우리 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남측 주민을 오는 11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조선 적십자사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씨는 불법입국한 범죄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남측에 있는 부인과 자식을 데려다 공화국에서 함께 살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해당기관에서는 그를 설득해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힘.
- 北 조평통 "주한미군 두고 남북관계 발전 생각할 수 없어"(9/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7일 미군의 남한 주둔 69주년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 발전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번영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이어 "우리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내보내기로 한데 대해 '평양점령'과 '북핵선제타격'을 노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 강행으로 응원단 파견을 파탄시킨 배후조종자도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함.
- 北 총리, 남북관계 개선 강조... "통일 새 국면 열 것"(9/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는 9일 열린 정권수립 6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가로놓은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北 "고위급접촉보다 빠라 살포 중단이 우선"(9/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입으로 열번 백번 북남 고위급접촉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앞에 나설 초보적인 체모라도 갖추는 것이 더 급선무"라며 "빠라 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 행위와 같은 동족대결 책동을 중지하면 북남 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지금 남조선 당국의 빠라살포 행위는 그 규모와 도수에 있어서 일찍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최근에는 빠라살포를 '풍선작전'이라는 군사작전으로 명명하고 그 집행을 포병을 비롯한 현지 군 무력을 동원하여 내놓고 뒷받침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난함.
 - 담화는 "우리는 침략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험악한 상태에서 북남 고위급접촉을 재개하자고 한 남조선 당국의 불순한 요구를 북남 대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을 우롱하는 최대의 죄악으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단단히 계산하려고 베풀고 있다"며 정부가 제의한 고위급접촉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조선신보, 北 응원단 파견 문제, 南이 아량 보여야(9/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메아리' 코너에 실린 '미녀군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참으로 유감이다"고 아쉬움을 표현함.
 - 이어 북한이 지난달 20일부터 인천에서 진행된 아시안게임 조추첨 행사에서 남측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공식으로 통지했지만, 남측이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하며 조선신보는 북한의 미녀응원단이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사절"이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측은 아량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
- 北 "南, 대화 원하면 'UFG 연습'부터 사죄해야"(9/2,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이 2일 남북대화가 성사되려면 남측이 최근 진행된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이 UFG 훈련이 끝나자마자 2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 남북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며 "남측이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UFG 연습으로 북남관계를 악화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北 대남매체 "고위급 접촉설은 파렴치한 술책"(9/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접촉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9월 대화설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나자마자 남한 정부가 '9월 대화설'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그들이 내돌리는 '고위급 접촉설'이요, '9월 대화설'이요 하는 것들은 미제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 분위기를 망쳐버린 책임을 회피하고 그 누구에게 전가해보려는 파렴치한 술책"이라고 주장함.

■ 北 대남매체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의 지름길(9/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북남관계 개선의 시금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에서 '대화'설이 계속 올려나오지만 지금은 남측이 책임적이고 성실한 행동으로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금강산 관광은 현시기 북남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는 금강산 관광은 이미 체계가 잡혀 있어 재개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처럼 쉬운 일을 뒷전에 밀어놓고 다른 문제를 내세워 대화와 협력을 운운한다면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5·24 조치와 같은 무거운 빚장을 질러놓고 새 통로를 만들자는 남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관계개선의 지름길인 금강산 관광재개에 계속 차단봉을 내리는 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北 신문 "신뢰구축 티령 말고 대결정책부터 철회해야"(9/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대결 흥심을 가리기 위한 신뢰구축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는 법이라며 "그러나 대화와 협력을 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말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함.
 - 남북 간 불신이 절정에 달한 현재 상황에서 '드레스덴선언'이나 '평화공원 조성' 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북남 사이의 불신을 제거하려면 이것저것 자꾸 내들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북남합의를 이행해 정치·군사적 대결상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신문은 "지금 남조선에서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각계의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이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왕청같은(영똥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자강도 용림서 단거리 발사체 1발 동해로 발사(9/1, 연합뉴스)
 - 북한이 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동쪽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220여km 내외로 판단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발사체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북한이 중국 국경 60여km 남쪽인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또 "발사체의 궤적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신형 전술미사일이거나 사거리를 조정한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北, 추석 앞두고 단거리 발사체 3발 또 동해로 발사(9/6, 연합뉴스)
 - 북한이 추석을 앞둔 6일 오전 '신형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북한이 사거리 210~220여km인 신형 전술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14일과 9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은

기존 전술미사일인 'KN-02'(최대사거리 170여km 추정)보다 사거리가 긴 신형 전술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해 잇따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가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5·24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거듭 요구(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실천적인 조치로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를 스스로 거둬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대결정책의 철회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사이의 신뢰와 대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포기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대화를 해도 북남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해도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실질적으로 가시기 위한 회담을 해야 한다"고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AG선수단 11일부터 6차례 걸쳐 서해직항로로 운송"(9/2, 연합뉴스)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2일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 손광호 부위원장 명의 서한을 권경상 인천AG조직위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왔다"며 "(북측은) 9월11일부터 10월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북측 항공기 편으로 평양-인천간 서해항로를 통해 선수단을 운송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이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11일에 축구·조정 선수단과 임원 등 94명이 인천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과 선수단 등 87명이 들어오고 19일(33명), 22일(41명), 28일(7명) 등에 걸쳐 총

262명이 평양-인천 직항로를 이용해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들 북한 선수단은 28일과 다음 달 5일 등 두 차례에 나눠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임.

- **북한 장애인AG 사상 첫 참가…인천에 선수단 파견(9/3, 연합뉴스)**
 - 북한은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서와 선수 명단을 지난 2일 통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대표 선수 9명의 명단을 APC에 보냈으며 북한이 임원 등 총 30여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낼 것으로 조직위원회는 예상함.
 - 대회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한층 힘을 얻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체육인, 인천AG에 기대감…통일열기 다시 한번 (9/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북한 체육인들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체육교류를 통한 민족화해를 강조했다고 소개함.
 -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장을 맡았던 체육성 체육기술국의 방문일(54) 국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북에서 남으로 것처럼 큰 규모의 대표단이 방문한 것은 조국이 분단된 이래 있어보지 못한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회상하며 "체육을 통해 6·15통일시대에 마련된 그 열기를 다시 불리일으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한 핏줄이 만나서 교류를 깊이 한다면 북남관계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통일의 기운도 고조될 것"이라고 말함.

- **정부, 월북자 김모씨 신병 판문점서 넘겨받아(9/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가 월북자 김모(52)씨의 신병을 11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보도함.
 - 정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함.

- **북선수단 방남 시작…정부, '돌발변수' 관리 고심(9/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1진 94명이 11일 인천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의 방남과 아시안게임 참여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돌발 변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 선수단의 방남이 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돌발 사건은 남북관계를 도리어 급랭시킬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선수단 숙소와 경기장 등지에서 북한 선수단에 높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한편 보수·반북단체 회원들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선발대 94명 인천 도착(9/11, 연합뉴스)**
 -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1진이 11일 오후 6시47분 고려항공 TU-204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서해 직항로를 거쳐 한국을 찾은 북한 선발대 94명은 장수명 조선올림픽위원회(NOC) 대표와 임원, 심판진, 의료진, 기자단을 포함해 축구와 조정 선수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입국한 북한 선수단은 미리 대기하던 버스 3대에 올라 경찰 에스 코트를 받으며 인천시 구월동 선수촌에 도착, 선수촌 웰컴 센터에서 미리 지급받은 AD 카드를 등록했다고 뉴스는 전함.

- AG 北 응원단 불참 관련 '이번 사태로 하여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15의 열기를 다시금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고 재차 책임을 전가하며 '남측의 부당한 처사 때문'이라고 주장(9.1, 중앙통신·노동신문, 9.2, 중앙방송)
- 남한의 韓美 합동군사연습 실시는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평화와 통일위업 실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는 근원"이라며 "북침전쟁연습 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애국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9.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北,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철회'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8.29, 통일부 대변인)'에 대해 "사태의 진상을 왜곡하고 신성한 체육문화교류마저 차단한 동족대결책동 합리화"라고 비난(9.3,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정부의 '北 인권문제 제기(北 인권사무소 설치결정 등)'를 "대결소동을 합리화하며 불순한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흉계"라고 비난(9.3, 평양방송)

- 'UFG 연습은 북침핵선제공격을 가상한 핵시험전쟁, 예비전쟁'이라고 지속 비난(9.4, 평양방송)
- 우리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北 응원단은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에 불과) 관련 '괴뢰 군부패당의 정신교육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당국의 핵방질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괴뢰 패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9.5, 중앙통신)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73호(9.5)】 인권위원회의 '北인권기록전시관' 설립 관련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남북관계를 더욱 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인권모략 광란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9.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지시 관철 위한 군민궐기모임, 9.5 원산에서 박정남(강원도黨 책임비서)·김정관(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참가한 가운데 개최(9.6, 중앙방송)
- 北 선수들, 인천AG서 자국산 새 유니폼 입는다(9.6, 통일신보)
- 대통령의 對北 발언(9.2,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 '통일대화')에 대해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모면"이라며 "북침 핵전쟁연습 중단 및 남북합의 이행 결단"을 주장(9.6, 중앙통신·민주조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립 계획 관련 재차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치놀음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의 절정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위협(9.7,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주한미군 주둔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에 대한 지향과 권리를 짓밟고 통일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주한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9.8, 중앙통신·노동신문·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은 최대의 인류사적 죄악)
- 남한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기록전시관' 설립 등 계획에 대해 "북남관계를 더더욱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도발"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 지속(9.12, 평양방송/극도에 달한 체제대결 광증)
-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9.13)】 제2차 고위급접촉 제의(8.11)에 대해 '전단지 살포'를 시비하며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와 같은 동족대결책동을 중지하면 남북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9.13,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인천 아시안게임에 '北 응원단 파견철회 반복하면 환영(9.2)' 등 발언 관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또다시 망쳐놓은 저들의 추악한 반통일적 죄악을 가리우고 민심의 분노를 피해보려는 구차한 꾀변'이라고 지속 왜곡 비난(9.13, 평양방송/응원단 파견 파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74호(9.14), 국방부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9.15, 인천 월미도)' 예정에 대해 '南 당국은 反北 대결광란극이 인천 AG와 남북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비난(9.14, 중앙통신·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군축연구소 "주한미군이 평화 위협...유엔 주목해야"(9/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5일 미군의 한국 주둔 69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과 그 주역인 미군에 대해 주변 나라들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계가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이 남측에 주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언급하며 "사드 남측 배치시도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남측이 다른 나라들의 핵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불러 일으키는 엄중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규탄...일에 과거청산 촉구(9/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일 '간토 땅을 피로 물들인 일제의 조선인 살육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간토 대지진 직후 살해된 조선인이 2만3천명에 달한다며 이 사건은 "그 목적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본 반동정부의 주도세밀한 계획 밑에 조작된 야만적인 조선인 집단학살사건, 피비린내나는 반인륜적 대살육만행"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도 1일 평양 중앙계급교양관 강사들을 출연시켜 간토 대지진 당시 일제의 조선인 학살 만행을 규탄했으며 리영란 강사는 "일본은 40여년간 조선을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오늘까지도 그 청산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도, 묻어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하루빨리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北 통신, 日 정부에 조선학교 재정지원 거둬 촉구(9/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1일 '총련말살책동의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조선침략범죄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도 마땅히 조선학교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조일(북일)우호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가 요구되는 이 시기에 일본 당국이 국제무대에서 총련에 대해 노골적인 말살 기도를 표방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며 "일본은 또 조선민족에게 죄 되는 일을 감행하면 초래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사드' 체계 南 배치 비난... "한반도 정세 위협"(9/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그동안 남한에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려고 압박을 해왔으며 미국이 사드체계를 남한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지조사도 진행했다고 지적함.
 - 이어 미국이 미사일방어 체계를 합리화하려고 북한의 위협설을 만들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꾀변"이라고 비난했으며 특히 "중국은 이미 전부터 남조선에 전개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사드체계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언급함.

다. 회담 관련

- 北 강석주 곧 유럽 방문...美·日과 접촉가능성 주목(9/2; 9/4, 연합뉴스)
 -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북핵·대미외교를 포함한 북한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약 10일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며 9일 브뤼셀에서 유럽의회외교위원장과 면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번 방문은 형식적으로는 방문국 정당과의 '당 대 당 교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강석주의 급(級)을 볼 때, 또 미국 정부 당국자의 극비 평양 방문설과 이달 하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이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모종의 임무를 갖고 강석주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강석주의 스위스 방문 시기(11~13일)에는 일본 총리실 납치문제대책본부 수장도 남북 일본인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10일)차 제네바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북일간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 <IAEA>(9/5, 연합뉴스)

- IAEA는 4일 발표한 영변 핵시설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흑연 원자로의 가동을 보여주는 수증기와 냉각수의 배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이어 북한 핵개발 계획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며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해 영변의 상황을 계속 감시했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또 영변 핵 단지 여러 곳에서 보수작업과 건설공사가 계속 진행됐으며 "이런 활동의 목적을 위성 영상만으로는 확실히 알 순 없지만, 핵보유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EU 집행위, 北 강석주 만날 계획 없다"(9/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는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라. 대미국

■ 北억류 미국인들 "美정부, 석방에 적극 나서야"(9/1, CNN)

- 미국 CNN 방송이 1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의 인터뷰를 방영함.
- 북측의 허용 아래 이뤄진 미국 CNN방송의 인터뷰를 통해 억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함.
- CNN의 월 리플리 기사는 "북한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 들렀다가 점심시간에 연락을 받고 어딘가로 이동했다"며 "처음에는 고위 당국자와 만날 기회인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야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만나게 됐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통로를 재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인터뷰가 성사된 동기를 해석함.

- 北, 억류 미국인 토드 밀러씨 재판 14일 예고(9/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억류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을 9월14일에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 북한이 밀러 씨에 대한 재판을 예고한 것은 미국에 특사 파견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며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CNN에 출연,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세 명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사 파견 등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 北,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에 6년 노동교화형(9/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9월 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라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함.

마. 대중국

- 北김영남 상임위원장 "북중우호 변화없다"(9/10, 교도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말 북한의 '친중파' 장성택 처형 이후 이상 징후를 보여온 북중관계에 대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웃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통신은 또한 김 상임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외유는 그 나라 사정에 따라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中 시진핑, 대북 축전서 양국 친선 '16지방침' 생략(9/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이 9일 공개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올해 북한의 정권수립 66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북중 친선관계의 기본 원칙을 담은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이 '16지방침'은 북중 친선관계를 집약한 것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우호를 강조할 때 의례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해왔으며 2007년을 제외하면 정권기념일 축전에서 이 문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바. 대일본

- "조선총련 의장 오늘 방북 위해 출국"(9/5, 교도통신)
 -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이 조선총련 부의장, 조선대학 학장과 함께 5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허 의장은 6일 평양으로 들어간 뒤 9일 북한 건국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함.
 - 출국 직전 허 의장은 북일관계에 대해 "스톡홀름 합의를 무겁게 봐야 한다"며 "서로 신뢰하며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北日 납치문제 협상, 중대고비서 '진통'(9/6,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이 9월 2번째 주에 납치 문제 재조사의 1차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9월 하순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함.
 - 최근 양측간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 측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북측은 새로운 정보를 거론하지 않은 채 "좀 더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닛케이는 소개함.
 - 또 북측은 조사결과 1차 통보의 대가로 북측 상업선박인 만경봉 92호의 일본 입항 재개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조사결과 통보가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조선총련 의장 환영연회... '김정은 영도' 강조(9/7, 노동신문)
 - 북한은 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함.
 -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 북한에 체류 중인 재일동포들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함.
 - 양형섭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연회를 마련했다며 "김정은 동지의 품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대대손손 안겨 살 위대한 사랑의 품"이라고 주장했으며 허종만 의장은 "총련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고 밝힘.

- 김영남 "움직임 나올지 모른다", 북일 관계에 기대 표명(9/9, 교도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8일 가네마루 야스노부(金丸康信) TV 아마나시(山梨) 사장 등 일본의 북한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일 관계에 관해 올해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北 "日에 통보할 납치 조사결과 충분"(9/10, 교도통신)
 -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협상의 북한측 당국자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시 병행적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을 성실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측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송 대사는 일본 측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이 아직 없었다고 소개하고 지난 7월4일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 개시에 발맞춰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한데 대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하나로 평가한다"며 북한의 1차 조사결과 통보에 맞춰 "일본 측이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 아닌가"라며 제재의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고 전함.

- "북일, 베이징서 극비접촉...일본인 납북자 협의 난항"(9/11, 교도통신)
 -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9월 6~7일 베이징을 방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와 극비 접촉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8월에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조사결과 보고 문제를 논의했으나 북한 측이 상응한 대가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며 북한 측은 특히 이번 접촉에서 납북자 조사 보고를 하는 대신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는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완화를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납북자 문제 진전이 대전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함.

사. 대러시아

- 북러, 불법체류자 상호 송환 협정 추진(9/6, 러시아의소리;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방 국가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서로 송환하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의소리 방송을 인용해 6일 보도함.
 - 이 방송은 양국이 이같은 내용의 불법체류자 송환 협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했으며 러시아 연방 이민국과 북한 측의 협의를 거쳐 관련 협약과 집행 의정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 국제기구

- 北,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9/11, 미국의 소리(VOA)방송)
 - 북한이 지난 9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식에 지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1일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노르웨이 화가, 내년 8월 평양서 미술교실(9/3, 자유아시아방송(RFA))
 - 노르웨이 화가 헨리 플락트씨가 최근 미술 전문지 '아트 뉴스페이퍼'와 인터뷰를 통해 2명의 노르웨이화가가 내년 8월 평양에서 미술교실을 열며 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해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북한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 미술교실은 북한 학생과 외국의 미술학도들이 예술을 주제로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명칭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뜻하는 영문인 'DMZ'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쿠웨이트,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2억3천만원 기부(9/6, 미국의소리(VOA))
 - 쿠웨이트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22만5천달러(약 2억3천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가 WFP를 통해 대북사업을 지원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北, 몽골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양해문(9/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과학기술위원회와 몽골 교육과학부가 평양에서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양해문'에 조인했으며 조인식에 전경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북한 주재 몽골 대사가 참석했다고 전함.

- 日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 9월 1일 귀국(9.1, 중앙통신)
- 北 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단장: 리명길 위원장), 9월 1일 프랑스와 몽골 방문차 평양 출발(9.1, 중앙통신)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9월 2일 러시아 연방평의회 1부위원장(알렉산드르 토르신)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2, 중앙통신)
- 러시아를 방문하였던 北 최고재판소 대표단(단장 : 박명철 소장), 9월 2일 귀환(9.2,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에서 흑인 소년 등 사망문제 관련 "미국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되고 있다"며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및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9.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보건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9월 4일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지역 제32차 보건상 회의와 제67차 총회(방글라데시)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9.4, 중앙통신·중앙방송)
- 유럽동맹 아시아센터 대표단(단장 : 프레이저 캐머론 소장), 9월 6일 평양 도착(9.6, 평양방송·중앙방송·중앙통신)
- 일조(*日北)우호 야마니시현 대표단(단장: 가네마루 야스노부 야마니시TV 주식회사 사장), 9월 6일 평양 도착(9.6, 평양방송·중앙통신)
- 「총련」 일꾼 대표단, 9월 6일 평양 출발(9.6, 중앙통신·평양방송)
- 영국 기업가협회 대표단(단장: 에브게니 레베재브), 9월 7일 평양 도착(9.7,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단장: 후쿠야마 마사키 사장), 9월 8일 평양 도착(9.8,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시진핑(국가주석)·리커창(국무원 총리)·장더장(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9월 8일 김정은·김영남·박봉주에게 '北 정권 수립' 66주년 축전(9.9,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푸틴 대통령, 9월 9일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北 정권수립' 66주년 축전에서 "앞으로도 건설적인 협조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9.9,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극초음속 병기(AHW) 시험발사(美 알래스카 州, 8.25) 실패 관련 '미국이 군축의 막 뒤에서 별의별 대량살육무기 개발을 다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무력강화책동은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세계 제패야망 실현의 흥심이 깔려있다'고 비난(9.10, 중앙통신/대량살육무기 개발에 비낀 흥심)
- 美 보수층 내에서의 미군철수 주장 보고서와 견해 발표(美 육군전쟁대학부설 전략문제연구소, 기업연구소, 랜드연구소 등) 관련 '남조선 강점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조속히 철수하지 않다가는 유사시 전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9.1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전멸을 원치 않거든 제 소굴로 돌아가라)
- 유럽동맹-아시아센터대표단, 9월 10일 귀국(9.10,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방부 대변인(존 커비) 발언(韓美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될 것)에 대해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강도적 야망'이라고 비난하며 '美 집권자들은 우리(北)의 핵, 미사일에 대한 공포가 커가고 있는데 대해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위협(9.11, 중앙통신·노동신문/언제까지 힘의 과신에 빠져 있겠는가)
-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단장 : 김창광 사장), 9월 11일 몽골 방문차 평양 출발(9.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단장 : 후쿠야마 마사키 사장)·北-日 우호 야마니시현 대표단(단장: 가네마루 야스노부 야마니시TV(주) 사장)·재일본 조선유학생동맹 대표단(단장: 박동호 위원장), 9월 11일 각각 귀국(9.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기업가 대표단 및 러시아 연방평의회 1부의장과 일행·「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9월 12일 각각 귀국(9.12,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러 우표수집전시회 폐막식, 9월 13일 조선우표박물관에서 진행(9.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리준식 부학부장), 9월 13일 귀국(9.13, 중앙통신·평양방송)
- 美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의 북·미관계 언급(8.31, '북핵문제-북·미 대화' 관련) 관련 '우리(北)의 핵은 결코 대화나 관계개선에 써먹을 거래수단이 아니다'며 미국의 '反北 정책포기' 주장(9.14, 중앙통신·노동신문/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부부,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9/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지난 3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바다 만풍가', '조국찬가', '근위부대 자랑' 등을 부른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고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창조기풍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칭찬하면서 특히 대표적인 새 작품으로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언급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번 음악회 관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함께했으며 김여정은 당비서 바로 뒤에 호명되었음.
- 오른 다리 절던 北 김정은, 이번엔 왼쪽 '절룩'(9/11,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공개한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는 지난 8월 말 김 제1위원장이 왼쪽 다리를 절며 일용품을 생산하는 '10월8일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이 왼쪽 다리를 저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목발을 짚거나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는 않았지만, 몸 전체의 균형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장성택 숙청' 이후 공식된 스웨덴 대사 임명(9/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작년 12월 외교라인에서 장성택 세력을 줄줄이 소환하는 과정에서 공식이 된 스웨덴 주재 대사직에 강용덕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강용덕은 북한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 과거 경력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으며 전임 스웨덴 대사였던 박광철은 장성택의 외무성 라인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작년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중국 베이징을 통해 북한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짐.
- "강석주, 독일서 시민당 국제위원장 면담"(9/10, 조선중앙통신)
 - 유럽을 순방 중인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8일 닐스 안넨 독일 사회민주당(SPD) 국제위원장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강석주 비서와 안넨 위원장의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노동당 대표단과 독일 주재 북한 대사가, 독일 측에서 연방의회 SPD그룹 대외정책조정자, SPD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본부 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함.
- 北 리수용 외무상, 국제회의 참석차 이란 방문(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이란에서 열릴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궁석웅 외무성 부상과 알리레자 가니마트푸르 북한 주재 이란 임시대리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비행장에서 리수용 일행을 전송했다고 전함.
- "北 강석주, EU 인권특별대표와 회동"(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을 순방 중인 북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유럽연합(EU)의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와 회동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이 자리에서 램브리니디스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램브리니디스 대표는 강 비서가 만난 유일한 EU 집행위 인사라고 RFA는 덧붙였다.
- 北, 강석주 벨기에 방문 보도...EU인권대표 만남 언급없어(9/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강석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9일과 10일 벨기에를 방문했다"며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외관계담당 부위원장, 유럽사회당 대외관계담당 부총서기 등을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담화들에서는 조선과 유럽동맹(EU) 사이의 관계발전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고 전했다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강 비서가 유럽연합(EU)의 인권특별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통신 "강석주, 스위스서 기독교민주당 관계자와 회담"(9/14, 조선중앙통신)

- 유럽을 순방 중인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스위스 체류 기간 기독교민주당(CVP) 간부와 회담하고 고위인사들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은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연방을 방문한 강석주 동지는 스위스 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서기 베아트리스 베르틀리 마이어한스와 회담을 했다"고 전하면서 강 비서가 이브 로씨에 스위스 외교차관과 파스칼 쿠슈팽 전 스위스 대통령을 각각 만나 담화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회담과 담화들에서는 두 나라 당과 정부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北, 10년 만에 교육일꾼대회 연다...교육개혁 주목(9/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마련된 제13차 전국 교육일꾼대회를 앞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교육 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교육 관련 논문들을 소개함.
- 북한에서 전국교육일꾼대회가 열리는 것은 김정일 시대인 2004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전반적 12년 제 의무교육을 도입한 데 이어 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교육 방법에도 변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 北, 10년 만에 건축가 대회…“건설 대번영기 열자”(9/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조선건축가동맹 제2차 대표자회가 3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회의에서 보고자로 나선 심영학 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짧은 기간에 은하과학자거리, 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등이 완공됐으며 "기념비적 창조물을 더 많이 일떠세워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나가자"고 호소함.
 - 대표자회에는 오수용 노동당 비서, 최영건 내각 부총리, 권성호 국가건설감독상,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 강영수 도시경영상,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등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이달 25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올해 두 번째(9/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제2차 회의를 9월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최룡해가 군 총정치국장에서 노동당 비서로 자리를 옮기고 당시 인민무력부장 직책으로 국방위 위원에 올랐던 장정남이 인민무력부장에서 해임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 인선 작업이 예상된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교육혁명으로 지식경제시대 인재 육성해야"(9/6, 노동신문)
 - 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을 빛내이자'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노작에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렸으며 특히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실천형 인재 양성하고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해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각 도·시·군의 관계기관이 해당 지역의 대학과 각급 학교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사례를 들며 기존의 대학들을 종합대학화하고 전문학교들을 대학에 통합해 인재의 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밝힘.
 - 이 대회에는 최룡해 당비서, 김용진·리무영 내각 부총리와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 北, 정권수립 66주년 즈음 청진시에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제막식 열려 (9/6, 조선중앙통신)
 - 정권수립 66주년을 맞아해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제막식이 9월 6일 김영남(제막사)·박봉주·현영철 및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제막식에서는 김정은 당 제1비서 및 당·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등 명의의 꽃바구니 진정되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정권수립(9.9) 6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9/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권수립 6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일 4.25문화회관에서 김수길(평양시당 책임비서/사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9일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최태복·김기남·박도춘·김양건 당비서,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교육자대회 앞두고 연일 '교수방법 개선' 강조(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여러 학교의 교육자들이 새로운 교수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도입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교수방법은 교육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며 교수방법 개선이 "교육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함.
 - 신문은 2일에도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회양고급중학교 김금숙 교사를 소개하며 그가 "학생들이 교사의 강의에 흥미를 갖고 끌려들어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교수방법을 개선했다"고 전했으며 1일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쟁쟁한 실력가로 인정받는 비결은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한 우수한 교육을 받은 데 있다"며 이 대학의 교육성과를 부각함.

- 北 "기회주의·평화주의는 절대금물"…체제 결속 강조(9/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체제에 충성하고 '체국주의'에는 저항하는 '계급적 원칙'을 이례적으로 강조하며 타협적인 태도를 경계함.
 - 신문은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계급적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계급적 원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책동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며 "혁명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혁명이라는 궤도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하며 계급적 원칙을 좌우명으로 심장에 간직해야 한다"고 밝힘.
 -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반미 대결의식을 고취함.
- 北, 정권수립 66주년…"김정은 중심으로 뭉치자"(9/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정권수립 66주년을 맞아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한길 따라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김씨 일가의 '업적'을 부각하며 "영도자(김정은)를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의 담보"라고 강조함.
- 北 노동신문, 추수 독려…"나라 쌀독 가득 채우자"(9/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본격적인 추수철을 맞아 1면에 게재한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는 사설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촉구함.
 - 간부와 농민, 정부 기관 등이 각각 추수에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협동농장 간부들에게 "위를 쳐다보며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기 단위의 농사결속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피타게 사색하면서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주문함.

- 北 “전력난 해결하자” 연일 독려…절전 운동도(9/11,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1일 '긴장한(부족한)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는 사설을 싣고 전력 생산을 독려함.
 - 사설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지금 어느 부분, 어느 단위에서나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력 증산으로 추수철에 '알곡기지'를 점령하고 제철·제강소, 경공업 공장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 앞서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와 교육지원전시회 개막식, 9월 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1, 중앙통신·중앙방송)
- 혜산청년역, 김일성父子 모자이크 벽화(백두산에 오르시어) 건립(9.1, 중앙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한 새 우표들(소형전지 2종, 묶음전지 1종) 발행(9.1, 중앙통신)
- 北, 정권 수립일(공화국창건일, 9.9절)기념 축구경기(8.20~9.9) 진행 소식 보도(9.1, 중앙통신)
- 김정은 당 제1비서, 9월 1일 현영철(인민무력부장, 육군대장)을 통해 10월8일공장 건설 참가자들에게 감사 전달(9.2, 중앙방송)
- 김보현(김정은 고조부) 사망 59주기를 맞아 9월 2일 김정은 화환 등을 만경대 묘에 진정(9.2,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최태복, 김용진(내각 부총리), 한광복(당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9월 2일 제13차 전국 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9.2,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가극예술에 대하여) 발표('74.9) 40주년 기념보고회, 9월 3일 평양대극장에서 박춘남(문화상)·안동춘(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기념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고산과수농장에 선물 전달(9.5, 중앙방송)
- 北, 김세륜(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김양점(인민군 장령)·리태남(평안남도 당위 제2비서) 등 11명의 유해를 애국열사릉에 새로 안치(9.5,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발표('08.9.5) 6주년을 맞아 저작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 불패의 강성국가 건설의 역사를 창조하며 백전백승을 펼쳐온 민족적 금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고무적 기치'라고 강조(9.5, 중앙통신·노동신문)
- 제54차 전국 노동자 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공연 '무궁변영하라 백두산 대국이며', 9월 7일 최룡해(黨 비서)·현상주(직총 위원장) 등이 관람하는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9.7,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140호(9.1),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 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 수여(9.7, 중앙방송)
- 김영남·박봉주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당·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우간다공화국 대사에 '명경철' 임명(9.10, 중앙통신)
- 선군정치 실시로 '정치사상강국·군사강국·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었다'며 '자주적인 선군정치 정당성' 주장(9.12, 중앙통신·노동신문/자주로 존엄 높은 곳에 민족의 번영이 있다)
-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9.11,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통근버스 선물', 9월 12일 안정수(黨 부장)·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모임 진행(9.13, 중앙방송)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9월 13일 '北 인권보고서' 발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北) 인권문제를 악용하는 실정에서 우리의 인권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배경 및 입장' 등 설명(9.13,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수도 평양에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시작(9/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양 대동강변에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미래과학자거리에는 500여세대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 편의봉사망을 비롯한 공공 및 봉사건물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게 된다"고 소개함.
- 북한, 나선특구서 중국인 대상 낚시 관광상품 출시(9/12, 흑룡강 신문)
 - 북한이 지난 6~7일 나선특구와 연결된 유명 관광지인 비파도에서 제1회 나선-옌지(延吉) 바다낚시 관광 행사를 개최했다고 흑룡강 신문이 보도함.
 - 북한과 손잡고 이번 관광을 기획한 중국 측 관계자는 "앞으로 가족낚시 관광, 북·중 낚시대회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에도 햄버거·BMW 인기, 민간경제 확산(9/2, 파이낸셜타임스(FT))
 -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 값비싼 햄버거와 외제차가 주민들에게 인기를 끄는 등 민간경제가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평양 르포 기사를 통해 2일 보도함.
 -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장한 평양의 문수물놀이장의 패스트푸드바에서는 햄버거 1개가 북한돈 1만원(약 76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입장료는 2만원으로

수백 명의 인파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비싼 정가를 다 내고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시설은 북한에서도 민간경제가 생활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FT는 분석함.

- 소매가가 200달러부터 시작하는 휴대전화도 북한에서 일상화되었으며 일본차와 폴크스바겐, 벤츠 등도 널리 보급돼 있었다고 먼디 특파원은 소개함.

■ 올 1~5월 北-EU 무역액 작년보다 14% 증가(9/8,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EU가 지난 1~5월 북한에 수출·수입한 물품은 1천402만유로(약 185억원)로 작년 동기 1천228만유로(약 162억원)보다 14.2% 증가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노동자들, 중동서 술 몰래 만들어 팔다 적발(9/3, 걸프타임스; 9/4, 미국의소리(VOA))

- 북한 노동자들이 술 유통이 금지된 중동 지역에서 몰래 술을 만들어 팔다가 잇따라 적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4일 전함.
- 카타르에서 발행되는 신문 '걸프타임스'는 북한 남성 2명이 허가없이 술을 만들어 현지와 제3국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했으며 이들 외에도 또다른 북한 남성 1명이 지난 2일 카타르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 북한으로 추방된다고 전함.

■ 北 고려항공 탑승권 인터넷 구매 가능(9/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인터넷 여행사 데스티니아가 지금까지 인터넷으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고려항공 노선들의 항공권을 판매하며 평양과 중국 선양,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노선의 전자항공권을 취급한다고 밝힘.
- 평양~선양 노선 탑승권은 왕복 365유로(약 48만3천원),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405유로(약 53만6천원)부터 시작하며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가 독점하던 평양~베이징 노선의 항공권도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며

이 구간의 왕복 항공권은 465유로(약 61만5천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함.

- 北, 러 기업인에 장기 복수비자 처음 발급(9/8,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 기업인들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장기 복수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극동개발부는 8일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러시아 시베리아 옴스크에 본사를 둔) 토목건설회사 '모스토빅' 직원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장기 복수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북한이 외국인에게 이런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함.

- 중국 단둥, 위탁가공무역 개시...북한서 의류 생산(9/11,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 북한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의류생산업체들이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시작했다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11일 보도함.
 - 신문은 단둥 해관(세관)이 최근 위탁가공무역 업무를 취급한 뒤 처음으로 23만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과 부재료를 북한으로 통관시켰으며 원자재를 보낸 중국 업체는 1개월 뒤 완성된 제품을 받기로 했다고 전함.
 - 단둥 해관의 장다오후(張道虎) 관장은 "이 정책은 해관의 올해 중점개혁사업 가운데 하나로, 국내 기업의 구인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국내외의 시장과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유엔 기구 올해 작황조사 거부"(9/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년 북한에서 해은 작황 조사가 올해 북측의 거부로 취소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실게 버 WFP 대변인은 RFA에 "북한이 국제기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해 매년 곡물 수확기에 북한에서 진행하던 작황 조사를 취소했다"고 밝히며 "작황 조사는 못 하게 됐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함.

- 北 "가을걷이 준비 빈틈없이" 연일 독려(9.1, 노동신문)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철정광 생산(101% 수행) 및 평양양말공장의 양말 생산(112.8% 수행) 등 여러 단위의 '8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보도(9.2, 중앙통신)
- 새기술 무역교류사의 새로운 '천연나노 물소독제' 연구·개발 선전(9.2, 중앙통신)
- 제9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9월 16일~1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 예정 및 "나라들 사이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9.6, 중앙통신)
- 평양 등 각지에서 "새 품종 잔디밭들에 대한 가을철 비배관리(죽은 잔디 폐기 및 살균 소독 등) 한창" 보도(9.6, 중앙통신)
-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에 앞서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와 교육지원전시회 개막식, 9월 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1, 중앙통신·중앙방송)
- 해산청년역, 김일성 父子 모자이크 벽화(백두산에 오르시어) 건립(9.1, 중앙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한 새 우표들(소형전지 2종, 묶음전지 1종) 발행(9.1, 중앙통신)
- 北, 정권 수립일(공화국창건일, 9.9절)기념 축구경기(8.20~9.9) 진행 소식 보도(9.1, 중앙통신)
- 김정은 당 제1비서, 9월 1일 현영철(인민무력부장, 육군대장)을 통해 10월8일공장 건설 참가자들에게 감사 전달(9.2, 중앙방송)
- 김보현(김정은 고조부) 사망 59주기를 맞아 9월 2일 김정은 화환 등을 만경대 묘에 진정(9.2,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최대복, 김용진(내각 부총리), 한광복(당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9월 2일 제13차 전국 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9.2,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가극예술에 대하여) 발표('74.9) 40주년 기념보고회, 9월 3일 평양대극장에서 박춘남(문화상)·안동춘(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기념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고산과수농장에 선물 전달(9.5, 중앙방송)
- 北, 김세륜(조선영화문학창작사 작가)·김양점(인민군 장령)·리태남(평안남도 당위 제2비서) 등 11명의 유해를 애국열사릉에 새로 안치(9.5,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발표('08.9.5) 6주년을 맞아 저작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 불패의 강성국가 건설의 역사를 창조하며 백전백승을 떨쳐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고무적 기치'라고 강조(9.5, 중앙통신·노동신문)
- 제54차 전국 노동자 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공연 '무궁번영하라 백두산 대국이어', 9월 7일 최룡해(黨 비서)·현상주(직총 위원장) 등이 관람하는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9.7,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140호(9.1),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 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 수여(9.7, 중앙방송)
- 김영남·박봉주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당·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驛우간다공화국 대사에 '명경철' 임명(9.10, 중앙통신)
- 선군정치 실시로 '정치사상강국·군사강국·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었다'며 '자주적인 선군정치 정당성' 주장(9.12, 중앙통신·노동신문/자주로 존엄 높은 곳에 민족의 번영이 있다)

-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9.11,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통근버스 선물', 9월 12일 안정수(黨 부장)·차희림(평양 시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모임 진행(9.13, 중앙방송)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9월 13일 '北 인권보고서' 발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北) 인권문제를 악용하는 실정에서 우리의 인권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배경 및 입장' 등 설명(9.13,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인권보고서' 발표... "인권대화 반대 안해"(9/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특성과 인권 보장 정책, 인민들의 인권향유 실상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보고서가 13일 발표됐다"고 밝히고 그 전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함.
 - 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공화국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과 우리 인민의 인권향유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폭로해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우리나라의 인권 실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함.
 - 또 "공화국은 인권 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으며 진정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나라들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하자는 것"이라며 "인권문제를 내정간섭과 제도전복과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진정한 인권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13일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탈북자 협잡꾼들의 증언에 저들대로의 억측과 악감을 섞어 만들어낸 쓰레기 문서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외국공관 무선인터넷 사용 제한"(9/9, 이타르타스 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에 사전허가 없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9일 보도함.
 - 이타르타스 통신은 북한 당국이 외국기관의 와이파이망이 주변 다른 건물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앞으로 평양 주재 외국공관이나 국제기구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신망 차단 조치와 함께 최고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고 전함.

마. 사회 동향

- 北 장애학생들, 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서 내달 공연(9/9, 연합뉴스)
 - 영국 런던에 있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두라'(DULA·www.dula.org.uk)는 9일 북한의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음 달 24일과 27일 각각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 음악, 무용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공연에 나설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 11명은 대부분 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나이는 11~20세로 이들은 아코디언, 가야금 등의 악기로 민요 '아리랑',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음악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 동화로 유명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도 무용으로 표현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평양국제영화축전 17일 개막...“100여편 출품”(9/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평양에서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된다"라며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세계 4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출품한 1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교육 관련 '노작' 연일 띄우기(9/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2면 전체를 할애해 지난 5일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공개한 김 제1위원장의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의 해설 기사와 김 제1위원장,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육 관련 일화들을 실음.
 - 이어 김 제1위원장이 노작에서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목표에 대해 "조국과 인민, 후대에 대한 사랑을 지닌 원수님(김정은)만이 펼칠 수 있고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만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전략"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이 목표에는 "인민 모두를 인재로 키워 하루빨리 경제강국, 문명국을 일떠세우려는 (김 제1위원장의) 불타는 애국 의지와 선견지명이 맥박치고 있다"고 치켜세움.

- 집 지어주고 헛사과도 선물...교수 '대접'하는 北(9/14,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정권수립 66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평양의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황해남도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헛물 사과'를 공급받았다고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김형직사범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평양건축종합대학·평양기계대학 등의 대학교원(교수)·연구사들은 친어버이(김정은)의 사랑이 어린 과일을 받아 안은 감격에 대해 토로했다"고 강조함.

- 해주시 제2인민병원 등 각지 보건소들에서 "새로운 고려의학치료방법들 도입(전기침요법 등), 예방사업 성과" 선전(9.3, 중앙통신)
- 체육과학원 체육기자재연구소의 새 마라톤 신발(한 켤레 무게 139g) 선전(9.5, 중앙통신)
- 양경일 선수, 9월 8일 2014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9.8~ 우즈베키스탄) 남자 자유형 57kg급 금메달 획득(9.9,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4년 어머니 젖 먹이기 주간'에 즈음한 토론회, 9월 11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9.11,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인 안보위협 1위 알카에다…북핵은 4위<퓨리서치>(9/2, 연합뉴스)
 -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와 USA투데이는 지난달 20~24일 성인 1,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미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꼽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은 57%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
 - 미국인들이 느끼는 최대의 안보 위협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것으로 나타났고, 북핵을 안보위협으로 꼽은 응답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안보위협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북핵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에서 67%를 차지했지만, 올해 8월 조사에서는 10%p 줄어든 57%로 나타나 지난해와 동일하게 4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됨.

- 美국무부 "6자회담 특사 임명, 대북정책 변화 아니다"(9/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장기 공석이던 6자회담 특사 자리에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기용한 것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일러 보좌관의 기용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정책상의 변화도 뜻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자회담 특사의 공석을 메울 적절한 시기에 사일러 특사의 NSC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국무부에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이어 "2011년 5월부터 3년 넘게 백악관에서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맡은 사일러 특사가 앞으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국무부의 대북정책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황준국 6자수석 방미...“북핵·북한문제 종합적 논의”(9/9, 연합뉴스)
 -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 한반도 관련 인사들과 회동해 북한 및 북핵 문제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 그는 "미국 측과 전반적인 북한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공유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와 관련한 문제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고 설명함.
 - 또한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황 본부장이 사전 관련 협의를 위해 급히 미국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 북핵 및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교환한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짐.

- 한·미·중, 17~18일 NEACD서 북핵문제 포괄 협의(9/14,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의 안보 대화체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올해는 북한의 참석 없이 5개국 관계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7~18일 미국서 개최될 것으로 전해짐.
 - 미국에서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중국에서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쉬부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가, 우리 측에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기획단이나 북핵외교기획단에서 국장급 당국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짐.
 - 각국 참가자들은 포럼 둘째 날로 알려진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관련 세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조건 등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임.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정책 변함없다...말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9/1, 연합뉴스)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패트릭 벤트렐 공동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미·북 관계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나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원칙은 변함이 없고 동일하다"고 밝힘.
 - 벤트렐 대변인은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고 기존 약속을 준수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달 중순 미 당국자들이 군용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비공식 접촉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제기되고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북 관계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관측들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전해짐.

- 사일러 "억류자 문제가 미·북 관계 걸림돌...뉴욕채널 활용"(9/5, 연합뉴스)
 - 시드니 사일러 신임 미국 6자회담 특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미·북 관계의 걸림돌"이라며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영사적 접촉은 물론 (대북 외교교섭 창구인) '뉴욕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펴고 있다"고 밝힘.
 - 사일러 특사가 억류자 문제를 미·북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뉴욕채널을 새삼 거론한 것은 정치사안과 인도주의적 사안을 분리해 접근해온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측됨.
 - 또한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외교와 압박, 억지의 3대 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평양 지도부가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경우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짐.

- 미국 "북한과 '석방 협상' 접촉 계획 현재로는 없어"(9/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이 억류중인 매튜 토드 밀러에 대해 오는 14일 선고재판을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함.
 - 이어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이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유엔 총회 일정과 겹치는 점을 고려할 때 석방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북측과 모종의 접촉을 시도할 것이냐는 물음에 "현 시점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함.
 - 또한 그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며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러셀 美차관보 "북한, 미국인 억류해 노리개로 활용"(9/13,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14일에 예정된 억류 미국인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 조짐은 없다"면서 "북한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노리개로 활용하고 이번엔 미국인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지난 7일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에 대한 재판을 14일 연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미국의 고위급 특사 파견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임.
 - 앞서 빌 클린턴 및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고, 미국은 케네스 배 석방을 위해서도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보내기로 했지만 북한이 이를 두 차례 취소한 것으로 알려짐.

다. 중·북 관계

- "북한대학 중국인 유학생 120여 명"<신화통신>(9/9, 연합뉴스)
 - 신화통신은 9일, 현재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 120여 명으로 확인됐고, 8일 류홍차이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부인과 함께 자국 학생들을 위문한 사실을 보도함.

- 류 대사는 자국 유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유학하는 기간을 잘 활용해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북 친선관계를 계승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함.
 - 이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대부분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외국어대 학생으로 단기연수 중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짐.
- 중국 기업들, 북한 진출 대신 접경도시로 몰린다(9/14, 연합뉴스)
 - 중·북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여파로 중국 내 대북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북한 접경 중국 도시들에서는 북한 근로자 도입과 위탁가공무역 확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전해짐.
 - 현지의 한 소식통은 "이달에도 중국 저장성 일대의 중소기업 대표 350여 명이 국경무역단지를 방문, 입주를 타진할 예정"이라며 "국경무역단지는 노동력이 부족한 훈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수천 명의 북한 근로자를 도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가동될 수 없는 규모"라고 전함.
 - 또한 "중국 정부 차원의 대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중국 언론도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은 대북 신규 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며 "남북경협이 막힌 상태에서 중국마저 대북 투자에서 중단하면 북한의 경제특구는 추진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 "中, 6자회담 복귀 표명시 北에 원유수출 재개"(9/14,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4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수출 재개 조건으로 핵개발 중단이나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할 것을 제시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북한의 연료부족이 정세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국이 휘발유나 제트연료인 등유 등 석유제품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급량이 증가했다고 전했고, 올해 1~7월 중국 주요 석유제품의 북한 수출량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47%가량 늘어난 약 9만2천t이 됐다고 전함.
 - 또한 중국이 자국 원유 생산량 감소를 우려해 장래에 원유 대신 석유 제품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원유 수출 중단에는 중국의 에너지 사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이며, 원유 수출을 둘러싼 중국의 대응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함.

라. 일·북 관계

- 현대연 "일·북 관계개선, 정부 전략적 대응 필요"(9/2, 연합뉴스)
 -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통일연구실의 이용화 선임연구원은 2일, '일·북 관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일·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외교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발표함.
 -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일·북 양국 간 교섭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과 임기 내 남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설명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다소 진전이 있겠지만, 북핵 문제의 미해결과 주변국 정세 영향으로 단기간에 양국 국교정상화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일·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한반도 정세 안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남북 교류, 협력 위축 등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어 정부 전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日-北, 8월 하순 쿠알라룸푸르서 극비접촉" <교도>(9/2,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하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당국자간의 극비 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함.
 - 이 통신은 지난달 21일을 전후해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측 비밀경찰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간부가 회동했다고 소개하며, 이 보위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조직으로, 북한이 일본과의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일본 측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북측이 새로운 정보를 거론하지 않은 채 이르면 이달 중에 할 조사결과 1차 통보의 대가로 북측

상업선박인 만경봉 92호의 일본 입항 재개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일북, 베이징서 극비접촉...일본인 납북자 협의 난항" <교도>(9/1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1일, 일북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6~7일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와 극비 접촉한 사실을 전함.
 - 이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8월에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조사결과 보고 문제를 논의했으나 북한 측이 상응한 대가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짐.
 - 북한의 첫 번째 조사 결과 보고는 이달 말 또는 10월로 늦어질 가능성이 전해지는 가운데 북한은 보고 장소로 평양을 제안했으며 요코타 메구미 등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 관련 정보는 새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日 아베 총리,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 압박(9/13,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13일 도쿄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납치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날까지 내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납북 일본인 중 일부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모든 납북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강조함.
 - 또한 그는 "과거에는 북한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 문제를 다룰 방법이 많지 않았다"라며 핵무기 문제와 관련한 대북 제재가 북한을 설득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돼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북한은 이달 말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생존 납북자들의 귀국에 대비한 준비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전해짐.

마. 러·북 관계

- "러·북, 불법체류자 상호 송환 협정 추진" <RFA>(9/6,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방 국가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서로 송환하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체류자 송환 협정 안을 마련 중이고,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하며 러시아 연방 이민국과 북한 측의 협의를 거쳐 관련 협약과 집행 의정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이 방송은 북한 박명철 최고재판소장이 지난달 29일 모스크바에서 유리 차이카 러시아 검찰총장을 만나 양국 간 인권·테러 문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불법체류자 송환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바. 기타

- 통일준비위 국제특보로 키신저 영입 추진(9/9,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9일, 통일준비위원회 산하 국제특보단에 해외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거물급 인사의 영입을 추진 중이라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국제특보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통일준비위가 키신저 전 장관의 영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의 경륜과 함께 냉전시절 동·서구의 긴장완화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란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정부가 참여 제안을 하더라도 올해 91세의 고령에 최근에는 심장 대동맥 판막 수술을 받기도 한 키신저 전 장관이 수락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짐.
- "유엔총회·안보리, 北 반인도적 범죄 ICC 회부해야"(9/10, 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임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함.
 -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이날 일본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COI 보고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해 9개항에 걸친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생생한 증거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짐.

- 또한 그는 지난 3월 COI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된 이후 북한이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에서 지적된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는 등 일부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함.

■ 케리 미 국무, 유엔총회 때 '北인권' 회의 직접 참석(9/13, 연합뉴스)

- 외교소식통들은 12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 기간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각국 외교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별도의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회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조명하고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인권 대응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유엔총회서 '북한인권' 급부상...외교격돌 예고(9/14, 연합뉴스)

- 외교소식통들은 12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 기간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각국 외교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별도의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회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조명하고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인권 대응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연합사단 편성 결정...연합방위태세 강화 목적(9/4, 연합뉴스)
 - 국방부는 4일, "한미 연합사단이 편성되면 평시 한미 참모 및 여단급 이하의 전술제대에서 연합훈련이 활성화되고,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한미 연합사단은 향후 인원편성 및 작전계획 발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상반기 중 임무수행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미 2사단장(소장)은 연합사단의 사단장을 겸직하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짐.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92년 한미연합야전군 사령부 해체 이후 22년 만에 연합부대를 다시 편성한 배경에 대해 "작전수행 간 보완적으로 임무수행을 하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것"이라며 "연합사단을 평시부터 운용해 한국군 장교들이 참모부에서 미군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 연합작전의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미국방부, 사드배치 어떤 결정도 내린바 없다고 확인"(9/5, 연합뉴스)
 - 국방부는 5일,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 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힘.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사드 1개 포대를 평택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주한미군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고, 미 국방부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강조함.
 - 또한 김 대변인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 "SCM 주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미측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의 요청이 오면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함.

- "미국, 한국에 군사지원 요청 없어"..정부 '인도적 지원' 방침(9/11,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IS 격퇴전략 발표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을 포함한 37개국 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 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짐.
 -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IS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한국과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일본, 스페인, 스웨덴, 쿠웨이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 10개국이고, 국제기구로는 아랍연맹이 지지의사를 표명함.

- 김관진 방미 출국...IS격퇴 '인도적 지원검토' 언급(9/14, 연합뉴스)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4일 미국 방문길에 올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측 고위 관리 및 학계 전문가와 만나 북한 인권 및 북핵 문제, 한미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중동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한 뒤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임.
 -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워싱턴DC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사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 또한 그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에 대한 미국의 격퇴 전략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며 "여러가지, 그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나. 한·중 관계

- 합참-中총참모부, 첫 소장급 실무회의 개최(9/3,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3일, 중국군 총참모부와 서울에서 첫 소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합참 전략기획부장인 김진형 해군소장과 중국군 총참모부

- 전략기획부장인 장명 육군소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힘.
- 합참은 "이번 회의에서는 전략부서 간 소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양국 군은 이 회의를 통해 양국 공군과 해군부대에 설치된 군사 핫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다. 한·일 관계

- 정부, 4년여 만에 日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추진(9/9, 연합뉴스)
 - 정부 고위 소식통은 9일, 한일 양국이 조만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도 4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함.
 - 정부가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안보정책협의회까지 재개하는 것은 역사,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도발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일본의 도발이 잦아들면서 기존 협의 채널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본은 연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내년 봄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유형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됨.
- 유흥수 주일대사, 마스조에 도쿄도지사와 면담(9/10, 연합뉴스)
 - 주일 대사관 관계자는 10일, 유흥수 주일대사가 9일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협한시위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이날 유 대사는 도쿄도청에서 마스조에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 내 극우단체의 협한시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NHK에 따르면, 면담에서 마스조에 지사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인천을 방문해 아시안게임 개최식에 참석하고 경기시설을 시찰할 계획이라 밝히며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 "일본, 11월 APEC때 한일정상회담 개최 모색" <교도>(9/13,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2일,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나란히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11월 10~11일, 중국 베이징) 기간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의 협력을 얻고자 외교 통로로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이 통신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양보(성의 있는 조치를 의미)'를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으로 제시한 한국의 입장이 변수라고 지적함.
 - 또한 이르면 내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 작업에 나설지가 당면 과제라고 소개했고, 일본이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때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윤병세, 한일 교류행사 참석...日대사와 첫 공개회동(9/14,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일 한일 양국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 축제한마당'에 참석해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벅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는 윤 장관이 양국 민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이번 행사의 의의를 평가하고, 문화협력과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 증진 등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함.
 - 벅쇼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런 교류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한일관계를 조금이라도 전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라. 미·중 관계

- 미중 수교 35주년... "갈등과 협력 공존"(9/5,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함.
 - 리 부주석은 "우리는 높고 멀리 보면서 손을 맞잡고 양국 간 신형 대국관계라는 배를 타고 더 아름다운 미래로 나가자"고 강조했고, 이에 카터 전 대통령은 "미중 관계 발전의 증인으로서 미중 간 우호적인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이로써 미중 관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1월 12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됨.

- 리스 미안보보좌관 "미·중 군사마찰 피해야"(9/9, 연합뉴스)
 - AP통신에 따르면, 수전 리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만나 "우리는 (군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도 피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함.
 - 또한 신화통신에서는 판 부주석이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의 대(對)중 근거리 정찰활동이 중단될 때까지 감소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양국 간 신형군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함.
 -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아 태평양은 양국의 이익이 얽혀 있고 가장 밀접하고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지역"이라면서 "양국 신형대국관계 구축은 아태 지역에서 마땅히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美 공습확대> "중국 군사작전에는 참여 않을 듯"(9/12,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2일, 1면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게 될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군사작전 참여 대신 '도의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함.

-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 테러리즘을 타격해 나가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는 미국의 IS 격퇴 전략에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국이 추진 중인 국제연합 전선에 동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화 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의 대테러 투쟁 과정에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면서 "관련 행동은 유엔 헌장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관련국의 주권독립, 영토안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

마. 미·일 관계

- "日, 새 미일방위지침에 적기지공격력 명기 인해"<교도>(9/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일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이르면 연내에 마련할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함.
 -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에 유의한다"는 등의 문구를 새 가이드라인에 명기함으로써 향후 적기지 공격력 보유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여지를 남기는 방안에 대해 미측과 조율 중이라고 소개함.
 -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때 2014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음.
- "미일, 공동작전지휘부 상설화 방침"<교도>(9/6,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6일, 양국 정부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공동작전을 지휘하는 상설기관을 설치할 방침을 세우며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감안할 때 평시부터 긴밀한 협력을 해야한다는 판단에 상설 지휘부인 '미일공동조정소'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통신에 따르면, 미측은 주일미군 사령부의 간부를, 일본 측은 통합막료감부(합참)와 육·해·공 막료감부의 간부를 미일공동조정소에 고정 배치한다는 구상이고, 양국 정부의 국방·외교 당국과 민간공항 및 항만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자도 유연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그러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하려하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온도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미일 공동 지휘기관이 상설화하면 자위대 활동이 미국 측 의향에 더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바. 미·러 관계

-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 속 현지 군사훈련 강화(9/4, 연합뉴스)
 - 미 국방부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3일(현지시간) 내주부터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래피드 트라이던트'에 미군 2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군사훈련 참가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미군이 현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 방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해 '뻔뻔한 공격(brazen assault)'이라고 비판하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집단 안보체제는 영원하며, 미국은 나토에서 맡은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서방의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日, 새 각료 중일관계에 긍정적 영향 기대"(9/4, 연합뉴스)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 임명된 인사들이 중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는 그들이 아베 정권의 대중 관계에서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희망하고, 또 일본 각계 인사들이 모두 중일 관계의 수호자와 촉진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친 대변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단행한 개각과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의 개각은 일본의 내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짐.
 - 또한 그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 69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매우 완전하고 명확하게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했다"고 강조함.
- 유임된 日외무상 "11월 중일 정상회담 더 노력"(9/4,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일,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관계'를 증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힘.
 -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달 미얀마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소와 수준에서 의견교환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기시다 외무상은 기본 가치와 관심을 공유하는 한국과도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과는 일본인 납북자 및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日 아베 총리,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 압박(9/13,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13일 도쿄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납치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날까지 내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납북 일본인 중 일부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모든 납북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강조함.
 - 또한 그는 "과거에는 북한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 문제를 다룰 방법이 많지 않았다"라며 핵무기 문제와 관련한 대북 제재가 북한을 설득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돼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북한은 이달 말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생존 납북자들의 귀국에 대비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고 전해짐.

아. 일·러 관계

- 일본 모리 前 총리 "푸틴, 아베와 대화 지속 원해"(9/1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고, 이번 회담은 일러 정상회담 실현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대화를 원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함.
 - 모리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고,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친서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 그간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의 협상으로 쿠릴 4개 섬(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표방하고 푸틴 대통령과 수차례 회담하는 등 친분을 부각해 왔음.

자. 기타

- 한중일 협력 시동... "정상회의 가능성 모색방향 노력"(9/11, 연합뉴스)
 - 한중일 3국은 11일 오후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사업을 논의함.
 -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3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개최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전했고, 11월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같은 달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함.
 - 한편, 현재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태지만 3국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 수행에 가장 적임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미국인 억류자 입 빌려 "대통령급 보내라"(9/2, 채널A)
 - CNN은 전날 평양에서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과 인터뷰를 방송했으며, 해당 인터뷰는 북측이 먼저 나서서 주선했음.
 - 억류자들은 한결같이 미국 정부를 향해 전직 대통령 같은 거물급 특사를 보내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음.

- 케네스 배 母 "北, 킹 특사 아닌 다른 인사 방북 원해"(9/2,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어머니 배명희 씨는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석방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북한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아닌 다른 인사의 방북을 원한다고 언급했음.
 - 배 씨는 지난달 11일 아들과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북한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로버트 킹의 방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 북한이 킹 특사의 방북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그가 담당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미국 정부, "北억류 3명의 미국인 석방 위해 모든 조건 고려 중"(9/3, 세계일보)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CNN 방송의 '뉴 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사 파견 등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북한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최고위급 특사를 원하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거절을 부연하며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광범위한 조치를 해왔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기에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얘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고 이들 억류자의 가족과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막후에서 벌이는 많은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에 억류된 미국시민의 안전한 석방이 최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혔다.

■ 北, 장애인AG에 첫 참가…인천에 선수 9명 파견(9/3, 데일리NK)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3일 북한이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와 선수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주최 측은 북한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북한 선수단의 입·출국, 의전, 수송, 숙박지원 및 안전업무에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북, 리수용 방미 앞두고 미 '인권 공세' 거듭 비난(9/3, YTN)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초 미국 미주리주에서 경찰이 흑인 청년을 사살한 사건과 극심한 빈부 격차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국가'라고 거듭 비난함.
- 또한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을 상실한 인권 낙제생 미국에는 국제인권재판정의 피고석이 제격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과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지적했음.

■ 북, 김정은 배려 물고기공급 중단(9/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올해 1월부터 김정은 제1비서의 특별 배려로 국경경비대 군인들과 사회취약계층에 공급하던 물고기배급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물고기를 가공해 다양한 식료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는데 소식통들은 가뜩이나 초라한 군인들의 식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 국경연선에서 밀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양강도의 한 주민은 6월 25일 이후부터 국경경비대 군인들에 대한 물고기 공급과 식용유공급이 모두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군인들이 수시로 민가에 들이닥쳐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급이 중단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국경경비대뿐만 아니라 중등학교와 육아원, 산원에도 물고기와 식용유 공급이 중단됐으며 다만 산원에 공급되는 미역은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덧붙였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군부대나 산원에 입원한 산모들에 보내지는 물고기는 수출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마구 뒤섞인 것 들이었다"고 밝혔음.
 - 그러나 북한 당국이 식료품 생산을 다양하게 늘리며 예전에는 부산물로 취급돼 일부 군인들이나 사회취약계층에 공급되던 잡어마저 모두 국가차원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만 해도 '라선대흥' 무역회사가 '명태회'나 '낙지포'와 같이 해산물을 토막 내 불량품확인이 어렵게 만든 식료품들을 장마당들에 내놓고 있으며, 청진시에 있는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서도 수출불량품 해산물로 소시지와 통조림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음.
 - 양강도의 소식통은 "물고기나 식용유 공급이 끊긴 후 군인들의 식생활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물고기나 식용유 공급을 대체할 다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공급을 중단해 군인들의 불만이 아주 높다"고 현지의 상황을 강조함.
- 사일러 미 6자회담 특사 "북한 미국인 억류, 양국 관계 걸림돌"(9/5, 미국의 소리)
 - 시드니 사일러 신임 미 6자회담 특사는 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인 억류 문제가 미-북 관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 또한 북한의 핵 문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 해결이 상호배타적 혹은 모순된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존 케리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함.
 -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인권 개선, 경제 성장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미안마가 밝은 길을 따를 것을 촉구했음.
 - CNN '북한 억류 미국인 인터뷰, 엄격한 통제 아래 이뤄져'(9/5, 미국의 소리)
 - 미국 'CNN 방송'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과 최근 평양에서 이뤄진 인터뷰와 관련해 사전에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억류 가능성을 위협했다고 보도했음.
 - 지난 1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인터뷰 했던 'CNN 방송'의 윌 리플리 기자는

3일 방송에서 이번 인터뷰가 북한 당국의 갑작스런 통보로 성사됐다고 인터뷰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 평양에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관광을 하고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 안내원들이 평양으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평양의 한 건물에 도착해서야 억류 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은 인터뷰 시작 전에 조건을 내걸었는데, 1인당 개별적으로 5분 씩만 주어지며, 내용은 범죄 혐의, 처우, 가족과 미국 정부에 전할 말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음.
- 또한 만일 규칙을 어기고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 질문을 하면 심각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함.
- 리플리 기자는 억류 미국인들도 인터뷰 전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음.

■ 북한 주민 한해 자살 1만명, 왜?(9/5, 헤럴드경제)

- 세계보건기구(WHO)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자살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선 2012년에 9,790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남.
- 가디언은 4일 WHO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자살 실태를 보도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자살이 많은 주된 이유로 가난,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사는 데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음.
- 일본 소피아 대학교의 산드라 파이 부교수는 가디언에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지만, 게이나 레즈비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북한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다"며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를 이유로 제시함.
- 연좌제도 주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파이 교수는 탈북자들로부터 가족 중에 탈북자가 나오면 처벌이 두려워 가족 전체가 집단 자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음.
- 가디언은 또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탈북의사 인터뷰를 토대로 발간한 보고서는 WHO 보고서와 내용이 달랐었다며, 북한에선 자살을 하면 반역자로 낙인찍혀 유가족이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살이 드물다고 분석했었다고 소개했음.
- 정신문제를 치료할 의료 센터가 드문점, 자살을 금기시해 자살 사건에 대해 입다무는 분위기 등도 북한만의 특이 상황으로 지적됐음.

- 북한, 생명권 개선됐지만 비공개처형 때문?(9/5, 데일리안)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4일 발간한 '2014북한인권 백서'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은 1990년대의 92%수준으로 소폭 개선됨.
 - 이는 생명권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인 '공개처형' 부문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줄어들면서 수치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공개처형의 감소는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압박이 거세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탈북자들의 비공개처형에 대한 증언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건강권·교육권·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정치적 참여권 등은 1990년대에 비해 확실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측은 그 원인으로 북한에 시장경제 시스템(장마당)이 자리잡은 것을 들었음.

- "북러,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 추진"(9/5, 자유아시아방송)
 - 국영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에 대해 상호 송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5일 보도했음.
 - 최근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 속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 방지 등 단속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임.
 - 방송은 이와 관련해 양국 간 불법체류자 상호 송환 협정안이 마련중이라며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했으며, 향후 러시아 연방 이민국이 직접 나서 북한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련 협약과 집행 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달 29일 모스크바에서 유리 차이카 연방 검찰총장과 박명철 북한 최고재판소장이 만나 공안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불법 체류자 송환 방안은 당시에 구체화됐을 가능성이 큼.
 - 러시아 대검찰청은 불법체류자 송환을 위한 북한과 협정 추진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북러 간 불법 입국·체류자에 대한 상호 송환 협정이 실제 발효될 경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 처벌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 북, 인권위 '북한인권 전시관' 추진 비난(9/5, YTN)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상설 전시관을 설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모는 망둥이라고 비난했음.
 - 또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남북관계를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결망둥이라고 밝혔음.

- 북한, UFG '인권전시관' 비난... "대화 운운은 우롱"(9/7, KBS)
 - 북한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 전시관 추진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화 상대를 반대하면서 대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음.

- 북한 '억류 미국인 밀러 14일 재판'(9/8, 미국의 소리)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해당 기관의 기소에 따라 억류된 매튜 토드 밀러 씨에 대한 재판을 14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또다른 억류 미국인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이 밀러 씨의 재판 날짜를 사전에 발표한 것은 미국 정부에 특사 파견 등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북 주민들, 가을걷이 왜 서두르나?(9/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아직 가을걷이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개인 폐기밭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도둑을 막기 위해 감자보다 강냉이와 조와 같이 빨리 여물고 도둑맞기 쉬운 곡종부터 이미 가을걷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개인들은 여무는 족족 밭에서 강냉이를 따 들고 있다"며 "어제는 강냉이를 따가지고 오던 도중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을 길바닥에서 다 맞기도 했다"고 밝혔음.
 - 양강도의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협동농장들보다 먼저 가을걷이에 나선 이유는 극성을 부리는 도적들 때문이며, 도적들을 막기 위해 밤이면 집집마다 폐기밭에 막을 치고 경비를 서야하는데 폐기밭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경비도 쉽지 않다고 지적함.

- 함경북도의 또다른 소식통은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를 시작하면 중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농촌동원'에 나가야 한다"며 "'농촌동원'이 시작되면 개인 폐기물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가을걷이를 해 뒤야 한다"고 현지 주민들이 가을걷이를 다그치고 있는 원인을 설명했다.
- 북 휴대폰가입자 240만, 증가세 둔화(9/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 Korea Tech)는 지난 8일,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업체인 고려링크에 가입한 북한주민 수가 지난 6월 현재 240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 이 매체는 북한의 체신성과 함께 고려링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집트 정보통신업체 오라스콤(Orascom)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가입자 증가추세가 지난해부터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 2008년 이래로 가입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올해 6월 정도면 가입자가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는 분석임.
 - 오라스콤측은 지난 해 5월 고려링크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가입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노스코리아테크는 이같은 가입자수 둔화현상을 고려해 볼 때 휴대전화를 가질만한 북한주민은 이미 다 가졌으며, 서비스업체는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9/11, 미국의 소리)
 -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9일 아동 매매와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했음.
 -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가 참석했음.
 - 선택의정서는 아동 매매와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 등을 목적으로 아동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으로, 아동 매매와 아동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강력한 처벌, 국제적 공조와 피해아동 보호 등 총 17개 항으로 구성돼 있음.
 -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5월 초 열린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북한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북한은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해 당사국이 된 후에는 2년 안에 의정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 산하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함.

■ 올해 UN작황조사, 북 거부로 취소(9/11,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당국의 국제기구 현장 조사 거부로 인해 조사단을 보내서 올해 작황을 조사하려던 '작황과 식량상황 조사(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힘.
- 유엔의 방북 작황조사가 무산된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임.
-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국제협력지원단장은 북한의 조사 거부는 부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세계식량계획의 실게 버 대변인은 작황 조사를 못하게 됐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북한에 있는 세계식량계획 국제요원들의 식량지원과 관련한 분배 감시를 강화해서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분배 감시 강화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 주민 사이의 식량 거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북한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임.

■ 북 농민들, '지원노력' 강력히 거부(9/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9월 10일 가을걷이를 위해 모든 공장기업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원 총동원령'을 내렸으나, 정작 농민들은 당국이 농촌지원을 빌미로 알곡을 수탈한다면서 '지원노력'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각 시, 군들마다 중앙당 비서처급 간부들로 가을걷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며 "비서처급 간부들이 협심하여 '가을걷이를 제때에 끝내라'는 것이 중앙의 지시"라고 밝힘.
-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각 공장기업소, 인민반들에 가을걷이를 지원할 협동농장들을 지정해 주었지만 협동농장들에서는 "아직 낱알이 덜 여물었다"는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이들의 노력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식통들은 농민들이 지원노력을 거부하는 원인을 북한 당국의 가혹한 수탈행위 때문으로 분석했음.
 - 자강도의 소식통은 "농사도 시원치 않게 되는데다 '포전책임제' 도입 후 알곡 수확량의 70%를 국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약속을 중앙에서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함.
 - 양강도의 소식통도 "농민들은 지원노력의 대가를 국가가 가져가는 70%에서 떼어내야지 자신들의 몫 30%에서 떼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지원노력의 몫까지 떼어내고 나면 자신들에게 차례질 식량은 거의 남지 않게 된다"고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 "북 억류 미국인 부인, 푸틴 도움 요청"(9/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의 러시아계 부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남편의 석방을 도와 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12일 뒤늦게 알려짐.
 - 지난 1일 평양에서 미국 AP통신과 짧은 인터뷰를 한 파울 씨는 러시아 출신의 아내가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을 대신해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힘.
 - 또한 러시아 측에서 '상황을 주시하겠다(watching the situation)'는 답변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 파울 씨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티모시 테페(Timothy N. Tepe) 변호사 사무실 측은 파울 씨 부인의 탄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음.
 - 北보위부, 탈북가정 방문해 회유·협박...‘재입북’ 유도(9/12, 데일리NK)
 -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가 탈북자 가족들을 접촉하면서 남한으로 간 가족들의 재입북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보위부 요원들은 출신성분이 좋은 탈북자 가족을 집중 감시하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내부소식통이 전했다.
 - 함경남도 소식통은 "최근 특정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를 포함한 회유공작이 더 집요해졌다"면서 "보위부원들은 지속적으로 탈북자 가정을 방문해 재입북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탈북자 가족에 대한 추방은 없지만 일부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는 한층 심해졌는데, 보위부 요원들은 새로 교부한 당증을 가져다 준다는 구실로 탈북자 가정을 자주 방문함.

- 이 자리에서 보위부 요원들은 탈북 가족들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강요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보위부는 일반 탈북자 가족보다 탈북 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출신 성분이 좋은 탈북 가족들은 특별히 신경 써 감시하고 있는데, 회유와 공작으로 이러한 탈북자들이 재입북하면 해당 보위부가 실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임.
- 이 때문에 보위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된 탈북자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보위원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北, '인권보고서' 발표... "인권대화 반대 안해"(9/13, 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주민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른 나라와 인권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특성과 인권보장 정책, 인민들의 인권향유 실상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보고서가 13일 발표됐다"고 밝히고 그 전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음.
- 중앙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공화국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과 우리 인민의 인권향유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폭로해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우리나라의 인권 실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탈북자 협잡꾼들의 증언에 저들대로의 억측과 악감을 섞어 만들어낸 쓰레기 문서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음.
-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5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권에 관한 북한의 '사상적 기초'부터 관련 법률,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러셀 美 차관보 "북한, 미국인 억류해 노리개로 활용"(9/13, SBS)
 - 북한이 14일 억류한 미국인에 대해 재판을 열기로 한 가운데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이 미국인을 억류해 '인간 노리개'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러셀 차관보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 조짐은 없다"면서 "북한은 늘 사람을 노리개로 활용하고 이번엔 미국인이며, 이는 매우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답했음.

- 北,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에 6년 노동교화형(9/1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9월 14일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라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밀러의 죄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밀러에게 적용한 혐의는 북한 형법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첩죄'라고 전했다.
 - 조선신보는 밀러가 "언론매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체질화했으며 법을 위반해서라도 조선의 감옥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실태와 인권 상황을 내담한 이른바 산 증인이 돼 세계에 공개할 야심을 가졌다"고 밝혔음.
 - 또한 밀러가 변호인 선정을 포기해 변호인 없이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재판이 열렸으며, 피소자(밀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마지막에는 범죄를 감행한데 대해 사죄했다고 덧붙였다.

2. 북한 인권

- 인권위, '북한인권 기록' 상설전시관 설립 추진(9/1,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북한 인권 기록전시관'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인권위는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전시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인권위는 2006년부터 3년마다 전략적인 중기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기(2015~2017년)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음.
 -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북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역할이 필요함을 피력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표명함.
 - 전시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인권위는 인권 침해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사진, 영상, 증언 자료 등 수집과 전시 범위를 가리지 않겠다는 방침임.
 -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분류·연구, 전시관 건립 및 유지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권위는 2017년까지 전시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일단 내년에는 기초연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북한 '전거리교화소' 참상 폭로하는 그림 전시회 열려(9/2, 데일리NK)
 - 비영리예술기관인 '아마도 예술 공간/연구소'는 서울 한남동 '아마도 예술공간'에서 '제3의 국적'이란 주제로 북한 전거리교화소의 실상을 삽화로 그린 작품 등을 포함한 작품 전시회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함.
 - 전거리교화소의 인권침해 실상을 그린 탈북 작가는 이곳에서 7년간 수감됐다가 2007년 출소한 후 한국으로 왔으며, 전거리교화소의 처참한 실상을 폭로하고자 그림을 그렸음.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그림이 실리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던 해당 작가의 한국 입국 후 첫 데뷔전으로, 그가 그린 북한 정권을 풍자하는 사진작품, 영상슬라이드가 전시됨.
 - 일본 정부, 10일 제네바서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9/3, 미국의 소리)
 - 일본 정부 내각관방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은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회의에서 납치 등 북한이 자행한 인권 침해 문제가 다뤄질 것이며,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위원 등이 참석함.

- "유엔총회·안보리, 北인권범죄 책임자 처벌 조치해야"(9/8, 연합뉴스)
 - 제이드 알 후세인 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첫 개막 연설을 통해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의 보고서에 관심을 두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권단체들 "유럽국가들, 대북 관계 개선 (9/9, 미국의 소리)
 -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해야 하며, 북한이 인권 개선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외교관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유럽연합과 방문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는 8일 유럽 나라들은 강석주 비서의 방문을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외교적 압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한다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에 요구할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위치의 리온 살티에 부국장은 유럽 나라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확대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나, 유럽연합과 4개 나라 정부가 대화를 지렛대로 북한 대표단에 인권과 핵 문제 개선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즈 위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담당 국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양호하다는 강 비서 등 북한 대표단의 어떤 주장이나 제의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영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의 인권을 위한 유럽동맹(EAHRNK)은 강 비서가 방문하는 나라 정부들은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신중하게 자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벨기에의 국제 인권단체 HRWF는 강 비서의 이번 방문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대표단과의 대화는 벨기에 정부와 유럽연합이 일부

인도적 사안들을 중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유엔총회·안보리, 北 반인도적 범죄 ICC 회부해야"(9/10, 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포함한 인권유린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임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음.
 - 또한 "지난 3월 COI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된 이후 북한이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에서 지적된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는 등 일부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은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동력을 얻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무엇보다 남북 일본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지"라고 소개했음.

- 北 강석주, 유럽의회 외교위원장과 북핵·인권 논의(9/11, 연합뉴스)
 - 유럽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유럽 순방중인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엘마르 브록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대화함.
 - 브록 위원장은 강 비서에게 북한과 유럽연합(EU) 간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음.

- 미 인권단체 전문가, 케리 장관에 서한(9/1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케네스 로스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 '감춰진 강제노동수용소'의 저자 데이비드 호크 씨 등 총 14명의 공동 명의로 케리 장관에게 지난

10일 보낸 서한을 공개했음.

- 서한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나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high-level side-event)를 조직하고 케리 장관이 직접 참여하라는 것임.
- 그럴 경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 정부, 北 억류 '김정옥 선교사' 석방 재차 촉구(9/12, 데일리NK)

- 통일부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옥 선교사를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송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음.
- 통일부는 "가족들이 김정옥 선교사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북측이 우리 측 요구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이전과 달리 우리 정부의 김 선교사 석방 촉구 통지문을 수령했음.

■ 유엔총회때 '北인권' 장관급 회의...한미 외교수장 참석 주목(9/13, 연합뉴스)

-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유엔총회 기간 각국 외교장관을 초청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조명하고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 유엔 총회 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별도의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한 외교소식통은 "유엔 총회를 앞두고 북한 인권을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인권운동가들의 목소리가 높고 미국 정부의 의지도 강한 상태"라며 고위급 회의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힘.
-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들의 외교장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인 참석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 케리 미 국무, 유엔총회때 '北인권' 회의 직접 참석(9/1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 기간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각국 외교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12일(현지시간) 밝혔음.
 -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별도의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임.
 - 케리 장관이 직접 북한인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것은 개인적 소신과 함께 올해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미국 조야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임.

3. 탈북자

- 北보위부 "탈북자16명, 태국 가서라도 잡아 올 것"(9/5, 데일리NK)
 - 지난달 초에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탈북한 16명 사건으로 함경북도 국가안전보위부에 비상이 걸려 탈북을 방조한 관련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그루빠가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발생한 세 가족 16명의 집단탈북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인민반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동요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추후 탈북하다 체포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전함.
 - 무산군 보위지도원들은 그루빠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보위원들 일부는 이미 철직된 것으로 보임.
 - 이번 사건은 함경남도 지역 인민반 회의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함흥 소식통은 국경과 먼 함흥에까지 보위원들이 인민반에 참석할 것을 두고 '보위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보위원들은 인민반 회의에서 "보위부가 가만 놔두는가 보라"면서 "이들이 타이(태국)에 갔다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라도 모두 잡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함.

- 보위원들의 이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소식통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위(당국)에서 하는 말들이 그대로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위부가 달아난 탈북자를 잡아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소식통은 세 가족이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 보위부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 가족만을 집중 감시하던 보위부가 국경지역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감시망을 넓힐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 경기도, 北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9/5, 인천일보)
-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국내 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2014년 6월 말 현재 도청 7명, 각 시·군 34명 등 총 41명의 탈북자들이 해외교류, 통합민원, 탈북민 상담, EM제조, 도서정리, 건축물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 이라고 밝혔다.
 - 이는 2014년 안전행정부 경기도 목표 25명보다 16명 초과 달성한 인원이며, 나아가 오는 2016년까지 자체 채용목표를 80명(도 10명, 시·군 70명)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는 탈북민이 300명 이상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은 부천, 성남, 김포, 고양시 등 4개시에 대해서는 적합한 직무 발굴 및 적극 채용을 적극 권고할 방침임.
 - 한편 올 한해 북한 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목표를 달성치 못한 지자체는 수원, 화성, 평택, 의정부, 파주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직파간첩 사건' 피고인 무죄... "권리 고지 안됐다"(9/5,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음.
 -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 검찰은 무죄가 선고되자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홍 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하며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함.
 -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 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비롯해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검찰이 홍 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냈는데, 홍 씨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홍 씨에게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음.

- 이어 "나머지 증거들도 간접·정황 증거들이라서 범죄를 뒷받침할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함.
- 검찰은 "굉장히 사소한 흠결을 갖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꼼꼼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음.
- 홍 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법수집 증거가 그럴듯하게 조작됐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국정원의 위법한 조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부, 탈북자 '중국어 관광가이드' 육성교육 실시(9/6, 연합뉴스)

- 통일부는 지난 6월부터 하나원에서 탈북민을 상대로 6개월짜리 중국어 관광 가이드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을 밝힘.
- 교육생들은 6개월간 하나원에 들어가 중국어, 관광 안내 및 실무 교육을 총 488시간 동안 받음.
- 하나원은 탈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용접기능사 등의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 중이며 중국어 관광 가이드 과정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음.
-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오래 체류한 경우가 많아 중국어 구사 능력은 뛰어나지만 중국어 읽기와 쓰기 실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광 가이드, 중국어 학습지 교사, 중국 관련 무역 업무 등 영역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음.

- "함북 김책시 주민 15명 해상 탈출"(9/11,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8월 말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3가족 주민 15명이 고깃배를 타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에서는 이들이 탈북에 성공했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 15명은 가족단위 탈북으로서는 큰 규모"라면서 "야밤을 틈타 이들이 관리하던 배도 함께 없어진 것으로 봐서 전원 탈북한 것으로 소문났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최근 고기잡이 바람이 불면서 해안경비대와 해군의 바다출입 통제를 허술해졌다"면서 "가족단위 탈북자가 나타나면서 이 일대는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 현지 주민들은 "이들은 사라진 지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남조선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상단속 기관들도 수색을 중단한 상태라고 소식통은 밝혔음.
 - 당초 김정은 체제는 탈북을 막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와 해안경비대, 해군경비정들로 하여금 바다출입증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어선을 소유하는 데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해왔으나, 올해 초부터 물고기 잡이를 적극 장려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가족단위 바다출입도 빈번해진 상태임.

- 울산 동구, 탈북자 정착지원 조례 입법예고(9/11, 연합뉴스)
 - 울산시 동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음.
 - 이 조례안은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조례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인식개선 사업, 출산, 양육, 보육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역 내 주민 간 교류, 결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함.
 -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뒤 의회서 통과되면 11월 공포·시행됨.

4. 이산가족

- 한국 통일장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대화 촉구(9/8, 미국의 소리)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맞아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이산가족 합동경모대회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북한 측에 대화를 촉구했음.
 - 류 장관은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번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 사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함.
 -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3만여 명 가운데 47%인 6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음.
 - 지난해 12월 말 조사 당시 5만 7천여 명이던 이산가족 사망자가 8개월 동안 2천 500여 명이나 증가했음.
 - 지금까지 상봉 행사를 통해 가족을 만난 사람들은 남북한 통틀어 3천여 가족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 대부분이 북측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봉 신청을 한 전체 실향민 가운데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 韓·美, 北에 이산가족상봉·미국인 석방 촉구(9/10, 뉴시스)
 - 10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에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교류에 응하고, 억류 중인 미국인 3명도 석방할 것을 공식 촉구했음.
 - 9월 8~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가짐.
 - 황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및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을 비롯해 남북 관계 개선과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인 석방 협상을 담당할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5. 납북자

- "北·日, 8월하순 쿠알라룸푸르서 극비접촉"(9/2,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지난달 21일을 전후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 간 극비 접촉이 있었다고 보도했음.
 - 비밀 접촉때 일본 측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북측은 새로운 정보를 거론하지 않은 채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조사결과 1차 통보의 대가로 북측 상업선박인 만경봉 92호의 일본 입항 재개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교도는 소개했음.
 - 통신은 일본은 이달 둘째 주에 북측으로부터 1차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통보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음.

- 일본 납치담당상 "북한 납치 가능성 행불자, 883명으로 늘어"(9/3, 미국의 소리)
 - 일본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은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 일본 정부가 집계한 특정실종자, 즉 납북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수가 모두 23명 증가해 총 883명이라고 밝힘.
 -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일본인 실종자들과 대조, 확인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이뤄지고 있음.
 - 특정실종자 수 증가는 북·일 협의 시작으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인해 실종자 제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해있으며, 일본 경찰청은 지난 6월 이후 전국에서 관련 상담 요청과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 공식 인정 특정 실종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860명에서 현재 883명으로 늘었으며, 일본 경찰청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바로 대조, 확인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이미 643명의 DNA 감정용 시료를 수집하고 있음.
 -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국제프로레슬링대회에 참석했던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은 2일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측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명단 작성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음.

- 야마타니 신임 납치담당상, "납북자 문제, 압력에 중점"...북·일 협상 적신호 커졌다(9/5, 헤럴드경제)
 -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こ) 일본 신임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3일 밤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에 관해 "대화와 압력 중 압력에 중점을 둔 자세를 관철하고 납치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 정부 일체가 되어 임해겠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 보다 강경한 쪽으로 선회한 것임.
 - 당초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10일 미얀마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9월 초에 1차 조사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지금까지 보고서는 전달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현재 만경봉호 입항, 경매에 넘겨진 채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및 토지 매각 중단 등의 추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쌀을 비롯한 물자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지난 4일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 측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개각을 통해 납치문제 담당상을 교체한 것과 관련 "왜 하필 한창 협상 중인 이때냐"며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음.
- 北日 납치문제 협상, 중대고비서 '진통'(9/6,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북한이 이달 둘째주에 납치문제 재조사 1차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9월 하순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일본 측은 되도록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새로운 제재완화 등을 희망하고 있어 북·일 간 협상이 진통을 겪는 양상임.
 - 최근 양측 간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 측은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북측은 새로운 정보를 거론하지 않은 채 "좀 더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임.
 - 일부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조사결과 통보가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北 "日에 통보할 납치 조사결과 충분"(9/10, 연합뉴스)
 -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시 병행적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을 성실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고 밝힘.
 - 송 대사는 일본 측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이 아직 없었다고 소개하고, 일본 측 인사가 방북해 북측 담당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지난 7월4일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 개시에 발맞춰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한데 대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하나로 평가한다"며 북한의 1차 조사결과 통보에 맞춰 "일본 측이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 아닌가"라며 제재의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음.

- 북·일, 베이징서 극비접촉…일본인 납북자 협의 난항"(9/11, 연합뉴스)
 -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6~7일 베이징을 방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와 극비 접촉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8월에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조사결과 보고 문제를 논의했으나 북한 측이 상응한 대가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북한 측은 특히 이번 접촉에서 납북자 조사 보고를 하는 대신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는 대북 경제제재의 추가 완화를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납북자 문제 진전이 대전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북한은 첫 번째 보고 장소로 평양을 제안했으며 요코타 메구미 등 납치 피해자 12명의 안부 관련 정보는 새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통신은 이에 따라 북한의 첫 번째 조사 결과 보고는 이달 말 또는 10월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 "북한이 납치범 인도해야 문제 끝나"(9/12, 미국의 소리)
 - 일본의 야마타니 에리코 신임 납치문제 담당상은 10일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납치범들을 일본에 인도해야 납치 문제가 모두 끝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야마타니 담당상은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해, 북한이 이달 말 이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통보 날짜나 보고서 형식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6.25전쟁 납북자' 69명 추가...총 납북자 3천375명(9/12, 연합뉴스)

- 정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실무위원회를 거친 76명의 심의 대상자 중 납북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였던 이선재씨를 포함한 69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했음.
- 나머지 2명은 납북자가 아닌 것으로, 5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음.
- 이로써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10년 이후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3,375명으로 늘어나게 됐음.
- 위원회는 또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심층 분석·정리한 진상조사보고서 집필을 위해 납북자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음.
- 또한 국내외 특수기록 자료의 추가 수집·분석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과 관련된 각종 전시자료의 수집활동도 할 예정임.

■ 日 아베 총리,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 압박(9/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북한에 대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또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 아베 총리는 13일 도쿄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납치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날까지 내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납북 일본인 중 일부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모든 납북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러시아, WFP 대북사업에 300만 달러 기부(9/3, 미국의 소리)
 - 러시아가 지난 8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초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300만 달러를 기부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의 켄 로 오시다리 아시아지역 본부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금 부진으로 오는 10, 11월까지 추가 5천만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1, 2월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 세계식량계획이 자금난을 이유로 최근 대북 사업 규모를 30% 줄이면서 당초 내년 6월까지 사업비용으로 2억 달러를 책정했던 것을 1억3천750만 달러로 조정했으며, 지원 대상 주민의 수도 2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줄였음.
- 쿠웨이트, WFP 대북 사업에 22만 5천 달러 기부(9/6, 미국의 소리)
 - 쿠웨이트가 지난 2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사업에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미화 22만 5천 달러를 기부함.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산모,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임.
- 재미 한인안과의사 5명 북 나선시 의료봉사(9/1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한인 의사협회 소속 안과 의사들이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 북한의 함경북도 나선시 지역에서 북한의 의료시설 시찰 및 치료에 나설 계획임.
 - 이들은 오는 9월 1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 나선시에 도착한 후 26일까지

지역 병원에서 녹내장, 백내장 환자를 비롯해 안구암 등 눈 질병을 앓거나 사고로 눈을 심하게 다친 북한 주민을 치료할 예정이다.

- 유럽연합, 북한 농촌 재난 관리 사업에 7만 2천유로 지원(9/11, 미국의 소리)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북한의 농업 분야 재난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사업에 7만 2천유로, 미화 9만 3천 달러를 지원했으며, 사업은 식량농업기구(FAO)가 진행함.
 -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와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위험 감소 사업에는 주민들에게 가뭄과, 홍수,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 전수 등이 포함됨.
 - 재난위험 감소 사업은 올해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첫 지원 사업임.
- 카리타스, 새 온실 건설사업 착수(9/12,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카리타스는 이달부터 북한 함경남도 함흥와 강원도 원산에 15개의 새로운 태양열 온실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모두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임.
 - 건설비용은 독일 정부가 지난 달 중순 독일 카리타스측에 지원한 60만 달러로 충당하게 되며, 함흥과 원산 지역 내에 온실을 세울만한 부지를 이달 초 북한 당국에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새로 온실이 세워지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모두 결핵과 간염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영양보충식으로 제공됨.
 - 독일 카리타스는 온실 건설사업 외에도 임상병리 실험실 연결망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11개 지방 임상병리 실험실 가운데 4곳이 완성돼 실험기자재와 시약 등이 비치됐다고 설명함.

- WFP, 대북 식량 지원 두 달 연속 증가..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9/12, 미국의 소리)
 -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음.
 - 실케 버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8월에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95,151명에게 2,075t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음.
 - 이는 84만 명에게 1천816t을 분배했던 7월에 비해 14% 증가한 규모이며, 7월에도 전달에 비해 24% 증가했음.
 -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한 달에 1만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8월 94만여 명에게 2천897t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30%가량 감소한 것임.

8. 북한동향

- 우리 정부의 '北 인권문제 제기(北 인권사무소 설치결정 등)'를 "대결소동을 합리화하며 불순한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흥계"라고 비난(9.3,평양방송/체제통일을 노린 어리석은 흥계의 발로)
- 미국에서 흑인 소년 등 사망문제 관련 "미국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되고 있다"며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및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9.3,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73호(9.5)】 인권위원회의 '北인권기록전시관' 설립 관련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남북관계를 더욱 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인권모략 광란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9.5,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인권위원회의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립 계획 관련 재차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치 높음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의 절정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위협(9.7,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정치적 도발)
- *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립계획 관련 '인권모략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를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라'고 위협(9.7,평양방송/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인권모략소동)
- * '北 인권기록전시관' 설립책동은 체제 대결의 또 하나의 극악한 발로'라며 '분별있게 처신하라'고 주장(9.7,중앙방송/무모한 단계에 이른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